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2022. 1





목 차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	---

II.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7
------------------------------	---

III. 2022년 핵심 추진과제	8
--------------------------	---

IV.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
----------------------------------	----

【붙임】 4년 반 성과 /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

□ 추진실적

- ❶ **(탄소중립 목표 확정)**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확정('21.10)
- ❷ **(법적기반)**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
- ❸ **(기후대응체계 재정비*)** 배출권거래제 강화('18→'20 △57백만톤), 석탄발전 상한계약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조실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기재부 → 환경부로 재이관 ('18.1)
- ❹ **(기후리더십)**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21.5, 서울),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21.10, 수원)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 의지 결집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정책효과

- ❶ **(탄소배출 변곡점)** '18년 배출정점 도달, 이후 2년에 걸쳐 약 10% 감축



'18년 배출정점 도달 후,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순(純) 감소세('18년 대비 △10.8%)

- ❷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세계 최초로 모든 지방정부(243개) 탄소중립 선언('21.5)에 이어 산업계*, 교육계('21.9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동참 확산
* 수소경제협의체 발족('21.9, 15개 기업), '30년까지 5대 그룹사 43조원 투자 발표 등
- ❸ **(기후선도국 도약)** 2030 NDC 상향,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30년까지 30% 감축), '50년 전까지 석탄발전 전면폐기 발표 등('21.11) 국제위상 제고

2

그린뉴딜 · 순환경제 성과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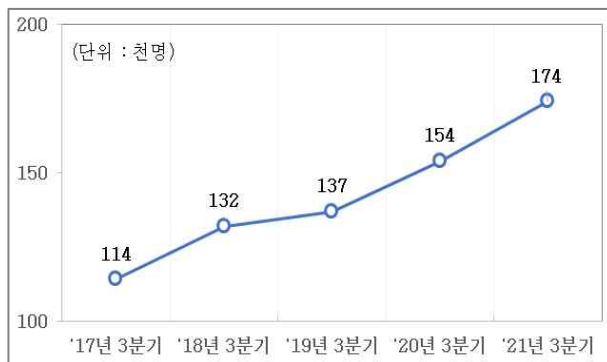
□ 추진실적

- ① **(그린뉴딜)** 녹색산업, 인프라, 저탄소에너지 총 5조원 투자('20~'21, 환경부 소관)
 -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기술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21.6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
 - *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자원순환(플라스틱 재활용)
 - (도시) 탄소배출 감소, 자원순환기반 강화 등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20~'22, 25개소) 등 추진
 - (에너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20~'21년 3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21.11 함천댐 41MW)으로 지역단위 에너지자립 기여
- ② **(무공해차 보급)** 제조사 보급목표(4~10%), 공공부문 구매의무(80%) 신설 등 과감한 보급제도를 마련하고, 충전인프라 확충* 추진
 - * 전기충전기 10.7만기, 수소충전소 170기 설치(~'21년, 누계)
- ③ **(순환경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수립('20.9) → △사업장 감량목표 관리, △페트병 별도배출 전국 확대, △재생원료 의무사용 등을 통해 '30년까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20% 감축 추진

□ 정책효과

- ① **(녹색전환)** 스마트생태공장('20~'22년 100개소) 등 산업계 녹색전환 촉진, 환경산업 경쟁력 신장(해외수주 '17년 1.1조원 → '21년 1.45조원) 및 일자리 창출*
 - * 환경분야 일자리(통계청 고용통계, 물·자원 부문) : ('17.3Q) 114천명 → ('21.3Q) 174천명
- ② **(무공해차 확산)** 무공해차 10배 증가('17년 2.5만대 → '21년 25.7만대, 누계), 충전기 1기 당 전기차 222대로 세계적 우수수준(비교: 美 16대, 日 10대, 中 6대)

환경분야 일자리(통계청 고용통계, 물·자원 부문)



무공해차 보급 추이



- ③ **(순환경제 초석 마련)** 투명페트병 전환('17년 63% → '20년 86%) 및 별도배출('21~), 재활용 동네마당 증가('17년 173개소 → '21년 240개소) 등 전기 마련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무색페트병 재활용 실적 : ('17) 14.2만톤 → ('21.7) 19.8만톤

3

미세먼지 획기적 개선

□ 추진실적

- ① **(특별대책)** ▲세계 최초 “사회재난” 지정, ▲특별법 제정('18) 및 관련 법령 정비('19), ▲추경('19년 1.3조원) 등 예산확충('17년 0.6조원→'21년 2.9조원)
 - 대기관리권역 확대('19, 중부·남부·동남권), 3차례 범정부 대책('17·'18·'19) 등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배출원 집중 저감
 - * (발전)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 석탄발전 상한제약('17~), (산업) 배출기준 강화('19.1~), (수송) 경유차 폐차('19~'20 100만대·저감장치 부착('19~'20 15.5만대), (생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 ② **(계절관리제)** 고농도 시기 특별대응을 위해 '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제1차: '19.12~'20.3), 이후 연차적 강화
- ③ **(한-중 협력)** 환경장관회담('20.11, '21.3), ‘청천(晴天)계획’('19.11) 합의·이행 등으로 대기환경 개선 유도
 - * (중국 베이징(전국) 미세먼지 농도) '14년 86(62) $\mu\text{g}/\text{m}^3$ → '20년 38(33) $\mu\text{g}/\text{m}^3$

□ 정책효과

- ① **(미세먼지 개선)** 그간 정체되어 있던 미세먼지 농도 획기적 개선*
 -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6년 26 $\mu\text{g}/\text{m}^3$ → '21년 18 $\mu\text{g}/\text{m}^3$
 - ※ (원인분석) △계절관리제, 상시대책 등 국내 정책효과, △중국의 지속적인 개선추세, △코로나-19 영향, △강수량, 풍속 등 양호한 기상조건이 복합작용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농도 -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농도 - 서울



- ② **(고농도 저감)** 계절관리제 추진 등으로 고농도 시기(12월~3월) 미세먼지 감소*
 - * (계절관리기간 내 평균농도) '19년 29.1 $\mu\text{g}/\text{m}^3$ → '21년 24.3 $\mu\text{g}/\text{m}^3$ (4.8 $\mu\text{g}/\text{m}^3$ 감소, 17% 개선)

4

통합물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제공

□ 추진실적

- ① **(물관리 일원화)** 수질에 수량('18.6), 하천('22년 예정)을 통합한 관리 체계 구축,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출범('19)을 통한 물 거버넌스 확립
 - 이를 기반으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역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21.6)
- ② **(자연성 회복)** 지역협의 기반, 4대강 보 개방('17.6~), 낙동강하굿둑 개방 추진
 - (금강·영산강) 5개 보 완전개방 및 평가를 통해 처리방안 제시('19.2), 의결('21.1)
 - (한강·낙동강) 지역사회 소통·협의를 거쳐 물 이용대책, 보상 등 추진 → 11개 보 중에서 10개 보 개방(한강 여주보 이외), 보 평가연구 병행
- ③ **(물 안전, 물 복지)** 물 공급 전과정에 대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추진, 수돗물 안전 및 풍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행

* 수돗물 안전·위생관리('19.11 적수, '20.9 유충) 종합대책,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20.11)

□ 정책효과

- ① **(낙동강 물문제 해결)** 폐놀유출('91) 이래 30년 묵은 난제였던 낙동강 1,300만명 먹는 물 갈등해소 방안 마련
 - (수질개선) '30년까지 낙동강 수질(TOC) II급수(현재 하류 III급수) 이상으로 개선
 - (취수원 다변화) '28년까지 취수원 다변화로 먹는 물 불안 해소 (대구·경북, 부산·경남)
 - (지역상생) △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 등 피해우려 방지, △상생기금 조성 및 주민지원,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도모로 영향지역(구마·합천·창녕) 우려 해소
- ② **(4대강 자연성 회복)** 보 개방 확대로 본류 물흐름 개선(체류시간 최대 △88% 등), 완전개방 보 구간의 수질·수생태 회복 확인
 - (녹조, 퇴적물) 완전개방 보 구간의 녹조(유해남조류), 저층빈산소, 퇴적물 오염도 개선
 - (생태계 회복) 수변공간 확대, 다양한 서식처 조성 → 개방기간·개방폭이 큰 금강수계에서 흰수마자^{멸종I급}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회유성 어류(송어) 발견('21.6)
 - 낙동강 하굿둑의 경우에도 건설('87년) 이래 최초개방으로 바닷물고기(뱀장어, 송어, 농어 등)가 돌아오는 등 생태복원 가능성 확인
- ③ **(물 안전, 물 복지 제고)** 국민적 수돗물 만족도 제고('17년 46.6% → '21년 69.5%, 먹는물 실태조사)
 - 노후상수도 개량 확대('17년 22개소 → '21년 146개소)에 따른 누수저감, 농어촌·산간 물 복지 향상(가뭄피해인구 '17년 4.5만명 → '21년 1만명으로 감소)

□ 추진실적

- ① **(환경보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17.8) 및 개정(2회),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 예방관리 로드맵'* 수립('20.9) 등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전국 난개발지역(2,400여개)의 환경오염부하, 인구특성 등을 토대로 지역별 환경오염피해 위험도를 등급화하여 차등화된 관리방안 마련

- ② **(화학안전)**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19.1,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확대*, 제품 전성분 공개** 등 관리체계 구축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 : ('17) 18개 품목 → ('21) 39개 품목

** 생활화학제품 1,508개(시장점유율 약 40%) 전성분 공개 ('21년, 누적)

- ③ **(국토환경)**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19~'23),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전략'('21.12) 수립·이행 등 전 국토 녹색복원 추진

-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20.6) 및 야생멧돼지 ASF 대응('19.10~, 울타리 설치 등)

□ 정책효과

- ① **(환경피해 예방·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및 지원 전향적 확대*, 환경오염 취약지역 대상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로 국민건강피해 사전 예방

* (피해인정자수) '17년 280명 → '21.11월 4,274명, (지원액) '17년 42억원 → '21.11월 1,107억원

** 국가산단(9개소), 난개발지역(21개소), 화력발전소(3개소) 등 건강영향조사 추진 중('21년 기준)

- ② **(화학제품 안전성 담보)** 제품 전성분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선택권을 증진하고, 제조사의 제품원료 전환 활성화* 유인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25개(누적) 선정 (안전성 평가등급 높은 원료+전성분 공개)

- 기준 위반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되어, 건강피해 방지 및 국민안심도 제고

* ('17~'21.11) 생활화학제품 8,153개 안전성 조사 → 기준 위반 271개 제품 조치

- ③ **(생태계 건강성)** 국가보호지역 확대*, 도시훼손지 복원 확산('20~'21 8개소) 등으로 국토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생태복지 향상

*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 ('17) 11.6% → ('21) 17.01% (UN생물다양성협약 권고기준인 17% 초과달성)

《평가 및 반성 - 4개 핵심분야》

- ①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중간경로(2030 NDC)가 설정된 바, 이를 향한 '대한민국 호(號)'가 순항하기 위해 경제주체 참여·지원 필요
 - 탄소중립으로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에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아울러, 탄소중립은 국민들의 실천으로 완성될 수 있으나, 그간의 정책은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부문 전환 유도에 중점
 - '더 늦기 전에, 지금 나부터'라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사회적 탄소중립 생활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필요
- ② **(자원순환)** 국민들은 분리수거에 수고를 감수하며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나 실제 재활용률은 국민기여 대비 미흡
 -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국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국민들의 분리배출 노력을 이어받은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필요
 - 또한, 폐비닐 수거대란, 불법폐기물과 같은 국민불편·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
- ③ **(미세먼지)** 그간 범부처 총력대응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획기적 개선추세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아직 미흡
 - ※ ('21.6 문체부 대국민 설문조사) 미세먼지 개선원인으로 ①코로나19로 인한 활동감소(61.4%), ②국외 유입감소(31.8%), ③정책효과(5.6%) 순으로 응답
 - 개선효과를 상시화 할 수 있도록 감축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층 밀착된 소통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필요
- ④ **(동물복지)** 사회발전에 따라 동물권(權)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전시동물(동물원 등)과 야생동물(사육곰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
 - 기후·환경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루고 환경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동물복지 강화 필요

II.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 그린뉴딜('20.7~)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 확정('21.10)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 전기를 마련
 - 243개 모든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21.5)에 이어 산업계, 교육계 등의 동참·호응도 잇따르고 있어 범국민 탄소중립 확산 여건 성숙
- ☐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민경제 활력,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바, 과감한 탄소중립 재정투자*의 마중물 효과 기대
 - * 2022년 탄소중립 예산 11.4조원, 기후대응기금 2.36조원
 - 다만,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반등,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요인 증가 우려도 상존
 -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신(新)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더욱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환경서비스가 요구됨
- ☐ 또한, 2022년은 하천업무 이관에 따라 매체(하천)와 수량·수질을 모두 아우르는물관리 일원화 완성 원년으로, 고질적 물 문제 해소에 대한 국민적 기대 고조

2 업무추진 방향

- ☐ (탄소중립 본격이행) 사회 쏠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확산과 환경분야 선도적·모범적 이행으로 탄소중립 정상궤도 진입
-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지역상생에 기반한 맑은 물 혜택 창출, 기후·재해에도 안전한 물관리 추진
-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환경위해로부터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계층과 자연·동물을 폭넓게 배려한 환경서비스 강화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목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3대 핵심 과제 / 6개 세부 과제

1. 탄소중립 본격이행

-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 ☐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흡수

2.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 ☐ 함께 누리는 풍요롭고 맑은 물
- ☐ 기후·재해에 안전한 물관리

3.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 ☐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 ☐ 환경서비스 저변 확장



법·제도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 2030 감축로드맵
- ❖ 하천관리 일원화

재정·기술

- ❖ 탄소중립예산·기후기금
- ❖ 그린뉴딜 2.0
- ❖ 환경R&D(AI·ICT·위성 등)

협력·상생

- ❖ 소통과 홍보
- ❖ 지자체 역량책임 강화
- ❖ 취약지역·계층 우선배려

핵심과제 1 : 탄소중립 본격이행

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달성을 향한 원년,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산업·금융·도시의 녹색혁신

□ [산업] 산업계 녹색전환 지원과 이를 견인하는 유망기업 육성

- (녹색전환)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22년 98개소) 및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 지원('22년 60개소), △중소·중견기업 대상 종합컨설팅('22~, 신규)

※ 이차보전(총 5조원 규모), 정책펀드(연간 200억원)로 녹색전환 뒷받침

- (녹색생태계) 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운영(외부감축 인정 등), 배출권거래제 감축실적 인정기준 확대*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 중소기업의 감축활동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 등을 감축실적으로 인정('22년)

- (녹색기업) 자원화, 기후컨설팅 등 기후테크 유망기업에 대해 전용융자*(2,500억원) 및 창업·상용화 지원

* 환경산업체 육성사업 2,000억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설비투자 500억원 지원

□ [금융] 금융계와 협업, 진정한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 촉진

- (분류체계)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22~, 총 100개), 채권·PF 대상 적용 시범사업('22~) 등 금융권과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 정착

- (환경성평가) 환경정보 공개(환경부) 대상 확대* 및 금융공시(금융위)와 환경공개 간 연계성 제고('22상),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 확립('22하)

* ('22) 자산총액 2조원 → ('24) 1조원 → ('27) 5천억원 → ('30) 전체 코스피 상장사

□ **[도시·건물]** 지역·건물 특성별 맞춤형 탄소중립 전환사업 지원

- (탄소중립 그린도시) 도시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감축전략*을 종합한 신(新) 모델 발굴·조성('22~, 2개소 시범)

* (에너지) 수열, 하수열, 바이오매스, 충전인프라 등, (흡수원) 생태복원, 흡수원 식재, (자원순환) 재활용, 감축, 선별시설, (기후적응) 녹화 등

- (탄소중립 건물) 공공부문 탄소중립 6개 선도모델* 대상으로 전환사업('22.3~),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범설치('22년 4개소)

*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 △광역정수시설

[2] 가정과 지역이 앞장서는 탄소중립

□ **[범국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생활실천문화 정착

- (인센티브)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제안 및 우수아이템 포상 등 생활실천 인센티브 강화('22.1~)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친환경 상품 구매 등

- (홍 보) 사례, 지원제도 등을 담은 '생활실천 안내서' 확대*·보급('22.9), 풀뿌리 조직(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협업한 연중 홍보·캠페인 전개

* ('21) 가정, 기업, 학교 → ('22) 공공시설, 군부대, 종교시설 등

- (교 육)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 지원체계 마련('22.12 기본계획 수립), 국가 교육과정에 탄소중립 내용 반영(~'22.12)

□ **[지역]** 역량강화 및 이행기반 지원을 통한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 (지자체)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22.7~),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수립 지원('22년 90개소) 및 컨설팅 실시

- (이행기반)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지원('22~) 및 탄소중립 정책·정보지원 통합플랫폼 구축('22~'24)

3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

□ [폐기물 감량] 생산·유통·소비 등 전단계 다이어트

- (생산·유통) 농산물·택배물 대상으로 과대포장 기준 마련('22),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3,300개)에 대한 감량지표 신설*

* 중소중견기업 폐기물 감량설비 지원 확대('21) 28억원 → ('22) 54억원)로 이행 지원

- (소 비) 편의점·마트 내 비닐봉투, 식품접객업장(카페 등) 내 종이컵 사용금지('22.11~), 1회용컵 회수 촉진을 위한 컵보증금 시행('22.6)

□ [재활용 확대(폐플라스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 (물질재활용)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식품용기)을 확대*하고 플라스틱(PET) 제조사에 재생원료 사용목표('30년까지 30%) 부여('22)

* 식품용기용 고품질 PET재생원료 시설·품질기준 고시 제정('22)

- (화학재활용) 폐자원을 연·원료화하는 공공열분해시설 설치('22~, 4개소), 열분해유를 석유화학기업이 원료로 사용가능토록 재활용 유형 신설(~'22.9)
- (열 회수) 오염, 이물질 혼입 등으로 물질·화학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형연료(SRF)로 활용하고, 소각시설의 열 회수를 의무화('22.하)

4 탄소중립 이행제도 안착

□ [로드맵] 2050 탄소중립, 2030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로 설정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 마련('22.3),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확정 추진(~'22.6, 탄소중립위·국무회의)

□ [재정·정책] 정부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 내재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22.3)

- (예산·기금)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22.1~)
- (계획·사업) 주요 계획,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영향(완화, 적응)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22.9~)

나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흡수

◇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을 귀중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속도감 있는 무공해차 보급으로 2030 감축목표 달성을 이끌겠습니다.

1 잠재·기피자원의 에너지화

- **[물 에너지]** 물에 잠재된 여력을 이끌어내어 지역 에너지자립에 기여
 - (수 열)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1~'27),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급 시범사업 추진('22년 민간·공공 각 1개소)
 - (수상태양광)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합천댐 우수모델 확산,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주민이 환영하는 재생에너지 생산(~'30년 4.2GW)
* '22년 준공 3건(13.4MW), 발주 1건(45MW),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3건(126.5MW)
- **[유기성 자원]** 지역의 골칫거리를 탄소중립 첨병으로 탈바꿈
 - (통합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 음폐수 등 통합처리시설 설치('22~, 4개소 신규), 공공·민간 부문별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추진)
 - (기반 확충) 기존 축분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 공정 추가('22년 5개소),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짚 등) 통합자원화 실증연구('22~'26)

2 메탄 감축 및 탄소흡수 확대

- **[메탄 감축]** 글로벌 메탄서약('30년까지 △30%) 이행을 위해 폐기물 부문 선도
 - (음식물) △무선인식 배출시스템 확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식약처 협조) 등 감량 유도, △퇴비화 금지('28~)에 대비하여 에너지화 확대
 - (매립지) 가스포집설비 운영 및 비위생 매립지 정비('22년 3개소)
- **[탄소흡수]**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 구축 및 기능 증진
 - 산림·습지 등 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토지이용변화지도 작성('22~'24), 흡수 증진을 위한 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21년 14.7% → '22년 16.5%, 누계)

③ 무공해차 50만대 시대 개막

□ [차량] 과감한 제도·지원으로 무공해차 50만대(누계) 보급

※ (전기차) '21년 23.8만대 → '22년 44.6만대, (수소차) '21년 1.9만대 → '22년 5.4만대

- (공급·수요 확대) 보급목표 상향* 및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 마련('22), 공공부문 신규차량 의무구매('22.하), 민간 K-EV100 확대로 수급 확장

* ('21) 4~10% → ('22) 8~12% / **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23년 시행)

- (재정지원) 고성능, 대중형 모델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22.1~)

* 보조금 지급대상 상한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5.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상용차) 국민생활 속 밀접한 승합·화물·이륜·통학차 보급 집중지원*, 신규차종 수요발굴('22년 수소버스) 및 실증사업('22.4~ 수소트럭 6대 이상) 추진

* (택시) 3천→2만대 (화물) 4만→8만대 (이륜) 5만→10만대 (통학차) 300대 시범사업 등 (이상 누계)

□ [충전]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 (전기충전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주요 교통거점·생활권 우선 구축, 지역별 특화구역 지정 등으로 핵심수요지 중심 확대('22년 누적 16만기)

-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 연계,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충전편의 대폭 개선('22년 누적 310기)

- (신기술 적용) 전기화물차 무선충전기술 실증사업*('22.1~),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 구축(150개소)으로 신개념 충전환경 조성

*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대상, 상차시간(30~60분) 활용

□ [내연차 프리존*] 무공해차 전용구역 지정을 통한 전환·이용 활성화

* ('22년) 운영방안 마련 → ('23~'24년) 시범사업 → ('25년~) 운영지역 단계적 확대

- 시범사업* 수요조사, 무공해차 운행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등 마련('22.하)

* 지역 상징성과 대국민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예> 제주도, 국립공원 등)

** 프리존 지역 대상 보조금·인프라 추가지원, 무공해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 2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다 함께 누리는 풍요롭고 맑은 물

◇ 안전한 먹는 물, 자연성을 회복한 우리 강
소외 받는 곳 없이 고루 누리게 하겠습니다.

1 맑은 물 혜택 본격화

□ [먹는 물] 누구나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

- (안전 관리)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과정의 수질·수량을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개량·교체 지원('22년 8,214세대)

* 161개 지자체, '19~'22년, 총사업비 1.2조원(국고 8천억원) 투자

- (요금·품질격차 해소) 영세한 수도사업자의 경제성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고('22~), 급수취약지역 대상으로 안전한 물 공급 확대**

* 대전-세종, 충남 서부권 등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MOU 체결 추진

** ICT 원격 운영 소규모 정수시설 공급('21~'22년 4개 시범사업) 등

□ [명품하천]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는 명품하천 조성

- (신(新) 하천모델) 하천변이 탄소흡수원 기능을 하도록 자연성 복원,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품는 명품하천* 조성('22~)

* ('22년 중랑천 시범 생태복원 및 홍수방어(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도확장), 수질개선(하수도 정비)

- (물순환) 하천별 물순환을 진단하여 수량·환경·치수 대책을 통합 추진

* '22년 4개 → '23년 8개 → '24년 16개 → '30년까지 161개 시·군으로 확대

□ [낙동강 통합물관리] 30년 갈등의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차질 없는 이행

-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절차를 본격 진행(~'22.6 예타, '22.7~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하는 한편, 주민합의를 도출

- (수질개선) 산업폐수 고도처리시설 도입('22~'25, 구미·대구성서) 등 낙동강 유역 수질관리 강화

② 지역과 함께하는 강·하구 자연성 회복

□ [4대강] 물의 수직적 흐름을 확보, 생태계 연결성 환원

- (개방 확대) 16개 보 전체*에 걸친 개방 폭·기간 확대로 연속된 물 흐름을 확보하고, 지류까지 포함한 유역모니터링** 도입('22~)
* 취·양수장 개선(66개소)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으로, 지역의 물 이용 장애를 근원적 해소
**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23개) 대상 유역별 진단에 따른 수질개선대책 병행
- (지역상생사업) 국민들이 건강한 생태를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지역문화·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추진('22~, 3개소)

□ [하굿둑, 소규모 보]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기수생태계 복원

- (하굿둑)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22)하여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고, 복원성과는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타 수계 확산·홍보
- (소규모 보) 하천 지류 내 900개 구조물(전국 총 4만개 중)에 대해 실효성·연결성을 우선평가하고 어도설치, 보 해체 등 시범사업 추진('22)

③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

□ [하수] 공업용수 등 고부가가치 재이용 확대

- 수도사업자가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22.1, 수도법 개정시행), 전국 산업단지 대상 공급확대* 방안 마련('22.12)
* (기설치) 포항(10만m³/일) 등 5개, (설치중) 청주(35천m³/일, '20-'22) 등 3개 + 추가 확대

□ [지하수] 지하수 물 이용 기반 확대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물 취약지역(섬)에 저류지 설치('22년 보길도), △지하철역 등 유출 지하수 활용 종합대책 마련('22.6)
*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수요를 관리(부담금, 신고제 개선), 물 부족 지역에 공공관정 공급

□ [빗물] 유출되는 빗물을 소중한 수자원으로 활용

- 빗물을 일시저류 후 방류하고 있는 빗물저류시설(방재용, 수질관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수자원 활용방안 마련('22.11)

라 기후·재해에 안전한 물관리

◇ 기후위기에도 **걱정없는 물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1 스마트한 홍수대응체계 확립

□ [스마트 홍수대응]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홍수관리 구현

- (홍수예보) 지류·지천 중심으로 홍수정보(수위) 센서를 확충*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자동화 및 홍수특보 지점확대('21년 75개→'25년 218개)
* ('21) 589개소 → ('22) 619개소 → ('23) 659개소
- (댐-하천 연계) 디지털트윈 구축을 통해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 취약구간 범람예측 등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22~)
* '22년 정보전략계획(IP) 수립 후 금강('23~'24), 낙동강('24~'25), 한강('25~'26), 영산강('26~'27)에 단계적 구축
- (도시침수 예방) 침수가 빈번한 지역 등 침수위험지도 제작확대*('22~), 하천-하수도 연계한 내수침수 사전예측모형 구축 추진('22~'26)
* (~'21) 4대강 57개 지역 → ('22~) 침수빈발지역 250여 지구 등 전국규모 확대

□ [대응기반 강화]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홍수 관리

- (홍수기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홍수량 변화를 댐·하천·하수도 설계기준(현재 최대 200년 빈도)에 반영('22~'23), 단계적 시설 정비
- (조절능력) 댐 홍수조절용량 재평가(~'22)* 후 추가 확보, 하천 인접 국·공유지에 홍수터 복원·강변 저류지 등 저감시설 설치('22~)
* (예> 섬진강댐('21)) 홍수기 제한수위 2.5m 강하, 홍수조절용량 3→9천만톤

2 극한 가뭄에 선제적 대응

□ [가뭄예측]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가뭄 취약지도* 작성(~'22.12)

* 가뭄 빈도, 가뭄 예측, 물 공급 능력, 민감도(생·공용수) 등 종합 평가

□ [선제대응]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 조정,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 추진('22~)

* ('22) 광역(보령)~지방(서산), 광역(울산공업)~지방(울산) 연계사업 추진

핵심과제 3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마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겠습니다.**

1 미세먼지 개선추이 안착

□ [부문별 감축]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축 지원

- (산업·발전) 다배출 업종^{*}(시멘트·철강·석유화학)과 중소기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및 R&D 지원으로 '19년 대비배출량 30% 이상 감축(~'24)
^{*} 청정대기전환 시설용자('22년 1,900억원),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저감기술 개발('22~'24)
^{**} 소규모사업장 연료전환('22년 26.5억원) 및 방지시설 설치('22년 2,172개소)
- (수 송)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확대('21년 34만대 → '22년 35만대),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22,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 (생 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1년 23만대 → '22년 61만대)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21년 10억원 → '22년 47억원) 확대

□ [과학기술] 성과평가와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반 고도화

-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예측모델 적용('22.11~), 환경위성 기반의 대기질 실시간 관측영상 확대('22.하, 총 20종 물질)로 평가·예보 강화

□ [국제협력] 한-중 협력 내실화 및 원인규명을 위한 국제공조

- (한-중 청천^晴계획)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 예방·저감사업 전반의 협력을 지속하고 기후변화 및 기술공유 플랫폼으로 확대('22.3~)
- (국제 공조)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판도라 프로젝트) 구축(~'22, 아시아 13개국),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24, 한·미·유럽) 추진

2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실내환경]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정주환경 조성

- (실내공기질) 실내오염물질의 인체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축주택 권고기준 개선,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22~)
- (충간소음) 실생활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기준 강화('22, 국토부 공동), 갈등 초기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22.하)

□ [화학물질·제품] 더욱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화학제품) 국내 유통되는 살균제·살충제 성분의 안전성 평가 완료('22), 생활화학제품(39종) 전성분 공개 및 QR코드 표시 확대('22)
- (화학물질) 유독물질을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22~), 사고예방을 위한 산단 24시간 원격모니터링 기반 구축('22년 여수산단 시범, 광화학카메라 등 활용)

□ [폐기물]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처리원칙 및 공공책임 강화

- (발생지 처리)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시·군·구 내에서 처리토록 하고 발생지 외 처리의 경우 반입협력금 부과근거 마련('22, 폐기물관리법 개정)
- (공공책임수거) 폐지, 고철 등 재활용 폐기물을 민간 주도 수거에서 지자체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로 전환('22, 폐기물관리법 개정)

바 환경서비스 저변 확장

◇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은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1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

□ [취약지역·계층] 거버넌스·빅데이터를 통해 환경취약지역 선제적 발굴

-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 환경 진단(차상위·독거노인 등 1,500개소) 및 시설개선(400개소) 등 취약계층 지원

□ **[피해구제]**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포용적 지원

- (환경오염피해)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및 오염 노출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지역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 지원('22~, 환경피해구제법 개정)
※ 자연친화적 복원 및 공동체 회복사업 병행('22~, 김포 거물대리 시범사업)
- (가습기살균제) 지속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확대, 추가분담금 징수 등 안정적 재원 마련,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을 위한 지원 추진

2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

□ **[생태계서비스*]** 전(全) 국토 가치를 최초로 평가**, 체계적 증진 기반 마련

* 공급, 환경조절, 문화 지지 서비스 / ** 「제1차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 발간('22.12)

- (자연자원 보전) DMZ, 도시공원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전활동 지원)를 확대*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의 혜택 증진
* 접경지역 지불제 대상(두루미 서식지) : '21년 3,950ha → '22년 5,350ha
- (브라운필드) 폐쇄·유휴화된 브라운필드(卍)장항제련소 부지)를 최초로 생태복원하여('22~'28), △야생동물의 안식처,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탈바꿈

□ **[동물안전]** 전과정 안전관리 및 전시·사육환경 획기적 개선

- (수입·유통) 백색목록 체계 도입(수입·반입 가능종) 및 수출입·유통·보관 신고제 신설('22, 야생생물법 개정), 야생동물 검역장 건립('22~'24)
- (전시동물)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전문 검사관제 도입,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22, 동물원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

□ **[동물복지]** 사육곰, 유기동물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곰 사육 종식) 곰 사육 및 응답채취 금지(기존 농가는 '25년까지 유예), 불법행위 차단 및 사육시설 안전관리 강화('22)
- (유기동물) 야생동물 구조센터(8개소) 대상 이송·보호 등 협업('22.1분기~), 유기·유실 사전예방을 위한 등록 시범사업 추진('22.상~, 라쿤 등)
- (보호시설) 사육곰,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23,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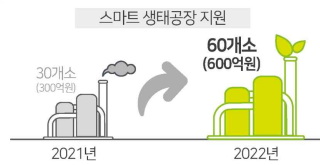
IV.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1회용 컵 보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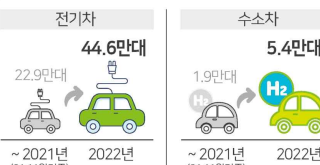


환경분야 탄소 감축·흡수

재생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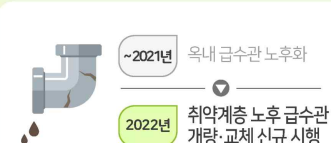


탄소흡수원



통합물관리

옥내 급수관 개량



新하천관리



하천 자연성 회복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미세먼지 감축



층간소음기준강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공개



환경서비스 저변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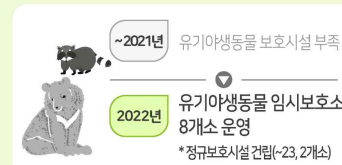
환경오염 취약지역 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



동물복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다시 돌아온 푸른 하늘)** A씨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취미가 생겨 매일 아침 창 밖을 본다. 예전에는 미세먼지·황사 등 잿빛 하늘에 마음이 우울했는데, 요즘은 하늘이 참 맑아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보니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 ※ 전국(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 '17년 25(25) $\mu\text{g}/\text{m}^3$ → '19년 23(25) $\mu\text{g}/\text{m}^3$ → '21년 18(20) $\mu\text{g}/\text{m}^3$
 전국(서울)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 '17년 60(64)일 → '19년 47(64)일 → '21년 23(35)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던 B씨는 호흡기질환 치료비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 '20년 9월 법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를 호흡기질환 위주에서 후유증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인정(1,351명 추가피해자 인정)
- **(무공해차 인프라 확대)** 서울 서초구에 사는 C씨는 큰 마음을 먹고 수소차를 장만했으나 집 근처에 수소충전소가 없어 상암이나 국회, 강동 충전소까지 가야 했다. 그러던 와중에 '21.3월 서초구 내 양재 수소충전소가 개장하여 충전이 한결 편리해져 수소차 이용에 만족을 표했다.
 - 강원 춘천에 사는 D씨는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고속도로를 타고 경기 하남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춘천휴게소에 충전소가 조기에 들어서고 수소차를 이용하는 춘천주민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감면(650원)해주는 정책 덕분에 차량 이용이 한결 편해졌다.
- **(금강 생태계 복원)** 보를 개방한 후 금강의 상징이었던 금빛 모래톱과 맑은 물, 그리고 사라졌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돌아오고 있다. 환경부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금강 3개 보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보가 열리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여름철 불청객인 녹조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축구장 101배에 달하는 드넓은 금빛 모래톱이 조성됐다.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이 조성되어, 금강을 상징하는 물고기인 '흰수마자(멸종 I 급)', 건강한 하천 생태계의 지표인 '수달(멸종 I 급)', 한국 고유종 '금개구리(멸종 II 급)'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이 다시 금강으로 돌아왔다.
 - 특히, 수달은 최근 금강 본류뿐 아니라 세종시 도심하천인 제천까지 그 활동 범위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반기고 있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탄소중립 실천확산)** E씨는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경제적 혜택도 쏙쏙하게 챙기고 있다. 집 안에서 에너지절약을 통해 탄소포인트를 쌓고, 자동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행거리 절감량만큼 탄소포인트를 적립한다. '22년부터는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 마트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니 포인트가 쌓였다. 또한 샴푸와 세제를 구매할 때 빈 용기를 들고 리필스테이션에 가서 채워오니 포인트가 더욱 두둑히 쌓였다. 입소문이 났는지 동네 주민들이 너도나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탄소중립을 향한 작은 실천이 가게에도 보탬이 되고 동네에도 널리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E씨는 한껏 뿌듯함을 느꼈다.

- **(수상태양광 확산)** 댐 주변에 거주하는 F씨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다. 얼마 전 댐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한다고 해서 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른 지역 사례와 연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걱정은 기우였다. 이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수상태양광에 투자했고, 태양광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자 투자금의 최대 10%를 투자 수익으로 받게 되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꼬박꼬박 수입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까 기대에 부풀어있다.

- **(낙동강 하굿둑 개방)** 하굿둑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G씨는 몇 년 전 하굿둑 수문을 연다고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소싯적 흔했던 재첩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교차했다. 막상 개방에 들어가니 물 이용에는 지장이 없었던 반면 연어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올해는 연중개방하면서 재첩을 방류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생태관광까지 활성화하니 지역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 **(전기차 충전편의 개선)** 전기차를 보유 중인 H씨는 직장과 집 근처에 충전기가 부족하고, 어렵게나마 찾은 충전기가 매번 고장 나 있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주택지역 등 중심으로 충전기가 대거 확충되었고, 네비게이션에 충전기 고장상태, 충전량, 사용요금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되어 주유소처럼 편리하게 충전기를 사용하는 중이다.

- **(동물복지)** I씨는 최근 공터에 방치된 라쿤을 발견하였다. 지나치려니 추위와 굶주림에 죽지 않을까, 혹여나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최근 유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가 구축되었다는 홍보 포스터를 보았고, 지자체에 신고하니 구조인력이 와서 라쿤을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구조된 라쿤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예정이라고 한다. I씨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